
2011신년대토론

평화를 향한 소통과 연대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2011년 1월 12일 14시

한 반 도 평 화 포 럼

한 겨 레 통 일 문 화 재 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 개회식

▶ 국민의례

▶ 인사말씀

· 임동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 제1부 : “2011년 정세전망과 평화전략”

▶ 사회 · 함택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발표

발표1. “2011년 미중관계 전망과 동북아 정세”

·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2.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선택”

·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 토론

· 강태호 한겨레평화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제2부 : “한반도 평화관리, 어떻게 이를 것인가?”

▶ 좌장 ·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토론

- 김상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 이종석 한반도평화포럼 상임이사. 전 통일부 장관
-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의제

1. 이명박 정부의 북한인식과 북한붕괴론
2. 한반도비핵화 - 6자회담 - 평화체제
3. 남북대화과 금강산문제 해법
4. 서해의 평화 해법
5. 천안함 사건 조사 해법
6. 2011 한반도 평화를 향한 시민행동

2011년 미중관계 전망과 동북아 정세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1년 미중관계 전망과 동북아 정세(요지)¹⁾

문정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미중관계 개괄 - 분석적 논의

- 90년대 초 냉전체제 해체 이후 형성되었던 일초다강의 지정학적구도가 급격히 변환하고 있는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침체는 새로운 형태의 G-2 구도를 가능케 하고 있음. 이러한 G-2 정국에서 조망 할 때 최근까지 협력적 성격을 띄어온 미중 양두지도체제 구도에 균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현재 미중 관계의 미래와 관련 하여 세 가지 경합 시각이 대두하고 있음.

- 대표적인 시각은 세력전이론 (power transition) 임. 패권국 미국의 국력 신장 속도는 둔화되는 반면 도전국 중국의 국력은 급격히 신장되고 있는 바, 중국의 국력이 미국의 국력에 육박할 경우, 두 강대국 간의 충돌은 회피하기 어렵다는 주장임. 여기서 하나의 전제 조건은 도전국인 중국이 국력 신장에 따른 국제지위에 만족하면 충돌 가능성이 적어지지만, 그 반대로 불만족 할 경우, 충돌 가능성은 커진다는 것임. 미국, 일본, 한국의 보수적 인사들 간에 널리 퍼져있는 중국 위협론은 바로 세력전이론에 기초한 것임. 이 시각에 따르면, 국력의 전이 양상으로 보아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임.

- 이와 대조되는 시각은 자유주의 전이론 (liberal transition) 임. 이 시각에 따르면 중국 위협론은 과장된 것이며 미국과 중국은 갈등 보다 협력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임. 중국이 경제 세계화를 전향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화평발전, 조화사회 기치 하에 주변국들과의 선린 관계를 유지하고 하기 때문에 공격적 또는 패권 지향적 정책을 전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임. 더구나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정치적 신뢰구축, 그리고 사회 문화적 교류 등을 감안 할 때, 이 두 나라가 대립과 갈등 보다는 협력과 공조의 길로 나갈 것으로 전망. 더구나 과거와 달리 중국이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다자주의 협력을 포함, 국제법과 국제규범에 대한 존중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공격적 대외정책을 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봄.

1) 한반도평화포럼 주최 “평화를 향한 소통과 연대” 발표문, 2011년 1월 12일 프레스센터.

- 마지막으로 절충주의 시각을 들 수 있다. 이 시각에 따르면 세력전이론은 과도하게 갈등 측면을 부각시키는 반면, 자유주의전이론은 나이브 할 정도로 미중 관계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임. ‘지는 미국, 뜨는 중국’ 이라는 역학 구도 하에서 이 두 국가는 협력과 갈등을 동시에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절충주의 시각에서 강조하는 것은 국내정치 변수인 바, 양자 간의 갈등과 협력은 고정 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의 향방 (미국의 경우는 선거 주기, 중국의 경우는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 고조)에 따라 변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2. 2010 년 미중 관계 회고

-2010년을 회고 해 볼 때 미중관계는 그리 순탄 하지 않았음.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이 미중 관계를 어렵게 해 왔음.

-가장 큰 문제는 경제 현안이라 할 수 있음. 미국은 중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엔화 평가절상과 국내 수요 진작을 통해 무역 불균형의 해소를 요구해 왔음. 반면,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압력을 거부하고 미국에 대해 거시경제 안정화를 요구해 왔음.

-대만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무기판매도 쟁점이 되어 왔음. 2010년 1월 미국은 대만에 대해 64억불에 해당하는 첨단 무기 판매를 결정한 바 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한 항의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6월로 예정되었던 Robert Gates 미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을 지연 요청한 바 있음.

-한반도 문제도 미중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음. 천안함 피폭, 북한 핵 문제와 6자회담 재개, 연평도 포격과 그에 따른 서해에서의 대규모 한미연합해상 훈련 등 주요 현안 문제들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상충되는 입장을 취하면서 정책 조율에 한계를 보여 왔음.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에서의 미중 대결도 가시화된바 있음. 조어도/센카쿠 열도 분쟁 시, 미국은 일본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고 남지나 해 영토 분쟁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동남아 국가들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입장을 옹

호한 바 있음. 반면, 중국은 서해, 동지나해, 남지나해는 중국의 영향권 하에 있는 바,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왔음.

- 중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미국의 정찰 활동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의 중지를 요청한바 있으나, 미국은 공해 상 자유 항해 원칙을 고집.

- 이 밖에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투명성, 중국 내 인권 개선, 그리고 이란 핵 문제 등과 관련하여 대중 압박을 가해 온 반면, 중국은 인도에 대한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지원 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 왔음.

- 이처럼 2010년 미중 관계는 협력 보다는 크고 작은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그러나 최근 양국 지도부는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작년 12월 James Steinberg 국무 부장관의 방중,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방미, 그리고 금년 1월 Robert Gates 국방장관의 방중을 통해 주요 현안들이 크게 조율 된 바 있음.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1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후진타오 주석의 국빈 방미와 후진타오-오바마 정상 회담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 할 수 있음.

3. 2011년 미중관계와 동북아 정세

- 1월 18일 후진타오 방중과 후진타오-오바마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큼. 그러나 미국의 대중 정책 기조로 보아 미중 정상회담이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백악관 NSC 동아시아 선임 국장이자 오바마 행정부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중국 전문가 Jeff Bader는 1) 중국과의 협력 확대, 2) 중국의 부상이란 맥락 하에서 미국의 역내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 강화, 3)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 규범과 국제법을 준수토록 종용, 이 세 가지를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는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 해 나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음.

- 2011년에 미중 양두체제인 G2 구도가 구체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미국은 중국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안보 분야를 제외한 분야,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중국과의 G2 협력 체제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나 중국은 G2 보다는 G20 구도 하에서 BRICs 국가들과의 공조 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미중 양두지도체제가 경제 분야에서 점차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됨. 반면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 보다는 경합 가능성 높은바, 중국을 의식한 미국 중심의 'spoke and hub' 공조 체제가 지속 될 것임.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신 냉전구도의 도래는 현실태가 아닌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한미일 3국간 군사 외교 분야에서의 협력과 공조가 강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남방 3각 축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더불어 북방 3각 축을 구축할 가능성은 적음. 중국과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 있어서 합동 군사 훈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지만 동맹적 결속을 거론 할 정도로 심도 깊은 것은 아니고 최근 급격히 밀착되기는 했지만 중국과 북한관계 역시 군사동맹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한미일 대 중러북' 구도의 신 냉전구도의 도래를 기정사실화하기는 이르다고 봄.

-그러나 후진타오-오바마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 할 수 있는 미중 간 경합은 2011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보임. 중국의 군사비 지출과 투명성에 대해 미국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미 해군 정찰과 관련 된 미중 신경전 또한 지속 될 것임. 동지나와 남지나 해에서도 양국 간 대치 구도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임. 이는 서 태평양 지역에서의 세력전이와 밀접한 관계를 지님.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해양국가로의 전략적 포석이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의 위상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특히 로버트 카플란이 지적한 제1열도선(쿠릴열도 - 동지나해 - 남지나해 - 말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에 대한 중국의 해군력 투사가 가시화되고 있고 미국은 서태평양 전력을 이용해 이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음.

-이러한 대치 구도가 중·러를 중심으로 한 대륙세력의 결속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임. 왜냐하면 러시아의 극동함대가 아직도 동면상태에 있고 중·러 간의 해군력 공조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한미일 3국이 동시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서해와 동지나해에서 공동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이 미일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참가 한다면 중국 역시 그에 상응하는 군사전략적 대응

을 할 가능성이 큼. 또한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미연합전력이 북한에 대한 군사 개입을 감행할 경우, 중러의 군사협력은 구체화 될 것임. 이미 이와 관련하여 금년 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접경지역에서 ‘화평사명’이라는 육해공 합동군사훈련을 계획 중임.

-사실 이와 같은 균열 구도의 가장 직접적인 진원지는 한반도라 할 수 있음. 남북한 관계의 대립구도가 동북아의 전략적 안보 지형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 천안함 사건이 일본의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미국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이는 미일동맹의 복원에 일정 부분 공헌했음. 또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서해에서의 대규모 한미 해상합동 훈련을 가능케 했음. 미국의 항공모함 전투단을 전개하는 이러한 훈련의 정례화는 서해에서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 시킨바 있음. 특히 연평도 사건 이후 워싱턴에서의 한미일 3국 외무장관회담 개최와 군사훈련강화 등 남북 3각축의 결속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유엔안보리에서의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 구도는 2011년도 동북아 정세가 그리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 해 주고 있음.

-북한 변수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북미 관계 개선을 지극히 어렵게 하고 있는바, 얼마 전 까지도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던 워싱턴의 온건파와 한반도 전문가들 까지도 최근에는 북한과의 대화 무용론을 들고 나오고 있는 실정임. 반면에 중국은 북한 측에 대해 역시자지의 자세로 대하고 있고 북한 입장을 상당 부분 옹호하고 있음.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상이한 접근이 한반도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 역시 동북아의 안보지형 변화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바, 대북강경정책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가 한중 관계의 악화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미중관계까지 꼬이게 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 하에서 미국은 한국을, 중국은 북한을 선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임.

-그러나 1월 20일 후진타오-오바마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개선 가능성은 있어 보임. 우선 미중이 ‘선 남북관계 개선, 후 6자회담 재개’라는 수순에 동의 할 가능성이 큼. 이미 스티브 보스워스의 방한, 방중을 통해 이 점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은 것으로 판단 됨. 최근 북한의 대화 공세도 이와 무관 치 않음. 여기서 한국 정부의 대응은 결정적 변수임. 북한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북 측 수용이 어려운 조건부를 제시하고 북이 수용 할 때까지 대화 재개를 거부하고 한미일 3

국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을 가 할 경우, 판이 깨질 공산이 큼. 반면에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6자회담을 주도해 나간다면 2011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청신호를 줄 수 있음.

전망과 대안

-전반적으로 2011년 미중 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이중적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 됨. 그리고 미중 관계 대립에 따른 동북아 신 냉전구도의 대두를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봄. 안보 지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은 경제적 상호의존과 협력, 사회문화적 교류 협력, 그리고 어느 정도 제도화된 정치적 신뢰구축의 기반을 유지해 오고 있음. 대화와 협력은 얼마든지 가능함. 특히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공동운명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중국에서의 배타적 국수주의의 발흥과 그에 따른 공격적 외교정책, 2012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외교 안보적 대응, 그리고 한국, 일본, 러시아 등의 중재 역할 결여 등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합을 조기에 촉발 시킬 수도 있을 것임. 이와 같은 사태 악화는 한반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미중 관계의 악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 치명적 타격을 가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임. 왜냐하면 미중 관계 악화는 남북, 한중, 중일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특히 미중 대립 구도의 첨예화는 ‘한국 친미, 북한 친중’이라는 냉전 시대의 진영 논리를 부활 시켜 한반도를 강대국 정치의 볼모로 전략케 할 가능성 큼.

-우리 정부는 이러한 개연성에 대비 보다 균형 있는 실용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 한미동맹이 중요하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으며 한미일 3국공조가 유용한 외교적 대안이나 우리의 국익을 크게 담보해주지는 않음. 결국, 중국, 러시아와 보다 적극적 외교를 전개해야 함. 특히 한미 동맹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경제 공동체와 다자안보협력체를 구성하는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우리는 ‘편 가르름’의 외교가 아니라 협력과 통합의 외교로 역사적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며 남북 관계 악

화를 빌미로 한 강대국들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함.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세 가지 조치를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첫째, 남북 기본합의서, 6.15 공동 선언, 그리고 10.4 정상 선언과 45개 후속 조치를 존중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임. 둘째, 6자 회담의 재개와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함. 6자 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는 검증 가능한 북한 핵 폐기, 한반도 평화 체제,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과 이에 대한 6개국 합의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함. 마지막으로 미국, 유럽과의 FTA에 합의 한 이상, 이제는 중국, 일본과의 양자, 또는 다자 FTA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국민적 합의를 구할 수 있는 외교적 대안을 찾아야 함. 친미, 친중으로 편가름하는 국내 여론 구조로는 우리의 미래 안보를 담보할 수 없음. 또한 남북 문제와 관련된 남남 갈등을 최소화 하기위한 총체적 노력이 필요함.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선택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선택: 2011년 전망

김연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

1. 2010년 전망, 왜 틀렸나?

2010년 초 필자는 한반도 정세 전망을 하면서, “남북관계는 어려워도, 6자회담은 재개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정세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남북관계는 전쟁직전 상황까지 악화되었고, 6자회담은 재개 시도조차 없이 1년을 보냈다. 왜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세 가지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다.

첫째, 북한의 후계 변수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은 예측했으나, 북한이 2010년 당대표자회를 개최하여, 후계체제를 조기 공식화 할 것이라고 예상 못했다. 북한 후계체제의 조기 가시화는 대외정책에서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가진다. 하나는 후계체제 가시화에 필요한 외부적 환경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내적 정당성 역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외부 환경 조성 측면에서 북한이 핵 협상을 서두를 것으로 보았으나, 북한은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오히려 연평도 포격이라는 국내적 정당성을 선택했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근본주의를 과소평가했다. 천안함 사건과 서해에서의 긴장고조가 대북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에서 확인되었듯이,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관료들은 북한 붕괴론이라는 가정에 기초해, 흡수통일론이라는 전략에 집중했다. 북한 붕괴론이라는 인식은 제재 강화, 대화거부, 긴장고조 등의 정책선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이러한 근본주의적 접근법은 2010년초 6자회담 재개를 억지하는 정책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정책변화를 제어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는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와 이에 따른 중국의 반발을 가

져왔다. 이러한 국면적인 미중 대립의 심화는 동북아에서 신냉전의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셋째,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적 리더십을 과대평가했다. 2009년 12월 보스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이 북미 추가접촉과 미중대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고 표현되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우선 요구하면서 움직이지 않았고, 동맹중시 정책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편승했다. 만약에 2010년 초에 북미 직접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한반도 긴장 상황은 피했을 것이다.

그러면 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적 리더십은 발휘되지 못했을까? 우선 미국의 경제위기로 국내 현안의 우선순위가 높아졌고, 핵심 외교 현안중 한반도 외교의 우선순위도 여전히 낮았다. 여기에는 북핵 상황에 대한 정보판단의 실패도 작용했다. 북한의 영변 5 MW 원자로의 노후화가 확인된 상황에서 북한의 핵개발 수준을 긴박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전략부재와 관심부족은 한반도 정책결정체계의 혼선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세 가지 변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양자관계 전망에서도 반복되었다. 서해에서의 긴장격화는 악화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발생했고, 한국의 국면 주도력을 고려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근본주의적 대북관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북미 관계에서 협상 계기의 실종은 오바마 행정부의 리더십 부재와 외교적 무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2010년 정세분석에서 중요한 변수로 설정했던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중협력의 강화’는 미국의 중간선거 변수와 한반도의 신냉전구도로 작동되지 못했다.

2011년을 전망할 때, 여전히 북한의 후계체제, 이명박 정부의 근본주의,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능력은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2011년에도 여전히 이러한 변수들이 중요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변화의 가능성도 보인다.

2. 2011년 한반도 정세를 결정하는 세 가지 질문

1) 북한의 후계변수는 대외전략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북한은 201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밝혔지만, 후계체제의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 후계체제의 정당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립할 것이다. 그러나 정당성은 물질적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경공업뿐만 아니라 민생생활의 개선을 강조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회복에서 대외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북중 경제협력이 질적으로 강화되고,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북한이 한, 미, 일 3국과의 이른바 남북정책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한계가 있다.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며, 제한된 재정능력을 고려할 때, 경공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증가될 수 없다.

또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면, 북한은 핵 억지력을 강화할 것인데, 북중 경제협력은 정세변화와 무관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북중 경제협력에서 양국 정부 차원의 공적 협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기업이나 지방정부의 경제적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의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고, 동시에 리처드슨 주지사의 방북을 계기로 6자회담 재개를 선택했다. 협상국면이 조성된다면, 북한은 후계체제의 외적 환경 개선을 위한 평화체제 프로세스와 물질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경제적 상응조치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핵 폐기와 상응조치의 병행 해결론, 그리고 행동대 행동이라는 동시 해결론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

협상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실패할 경우, 북한은 핵 억지력 강화에 나설 것이다. 북한은 플루토늄 방식에서 우라늄 농축방식으로 핵 개발의 초점을 전환했기 때문에, 플루토늄 폭탄의 성능개선을 위한 핵실험 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고, 운반수단인 장거리 미사일 성능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 북한이 우리나라 농축시설을 소규모 경수로 건설을 위한 저농축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북한은 협상과 핵 억지력 강화의 기로에 서 있으며 현재 어떤 경로로 갈 것인지를 미국에 묻고 있다. 협상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후계체제의 외적 환경과 물질 기초를 조성하는 데 활용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핵 보유국이라는 후계체제의 정당성 이 데올로기로 전환할 것이다.

2) 이명박 정부는 붕괴론에서 접촉론으로 전환할까?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정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대북전략 개념은 크게 붕괴론과 접촉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1988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접촉을 통한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추구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붕괴론을 추구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접촉을 통한 변화’라는 포용정책을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아왔다. 이명박 정부는 다시 붕괴론을 대북전략으로 삼고 있다.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대화나 협상은 무의미하다. 붕괴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붕괴이후의 상황인 흡수통일에 대한 국내적 정당성에 주력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전부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말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책 담론들은 일관성이 부족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붕괴론을 신봉하는 인사들 중심으로 외교안보팀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뉴라이트를 통일비서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여전히 붕괴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붕괴론은 세 가지 측면에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는 국제사회의 6자회담 재개노력과 상충된다. 붕괴론은 장기 전략이지만, 6자회담 재개는 당면한 현안이

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에서 이명박 정부의 붕괴론은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 하지만 북한의 대화공세와 주변국들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한국이 6자회담 재개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는 실적에 대한 책임감이다. 임기 4년차는 모든 정책에서 실적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대북정책도 마찬가지다. 붕괴론이라는 근본주의적 접근법에서 보면,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성과를 부정할 것도 성과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최소한 이명박 정부가 정책 목표로 내세웠던 분야에서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전통적인 대북정책의 성과지표에서도 현저하게 미달되며,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과 같은 보수적인 현안에서도 성과가 거의 없다. 북한 인권 수준의 개선수준도 마찬가지다.

셋째는 여권 내부의 도전이다. 안타깝게도 보수 진영의 후보들은 마치 경쟁적으로 냉전반공주의를 보수적 정체성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이명박 정부도 레임덕이 진행되는 만큼 보수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국내정치적으로 근본주의를 전환할 동기는 적다. 다만 총선 국면이 시작되는 하반기가 되면, 합리적 보수층의 지지를 구해야 하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을 보면, 붕괴론에서 접촉론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적다. 다만 6자회담이 재개되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협상국면이 조성되면, 이명박 정부 역시 대화와 협상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대화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협상에 대한 의지가 없고, 현안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에, 상황을 주도하기보다는 끌려 다닐 것이다. 이 과정에서 즉자적 대응이 반복될 것이며, 혼선이 일상화되는 현상도 나타날 것이다.

3) 미국은 무시전략에서 개입전략으로 전환할 것인가?

오바마 행정부 2년은 최소한 한반도에서 전략의 부재와 전술적 이익의 추구로 나타났다. 북핵 문제와 관련, 협상은 중국에서, 제재는 한국에서 아웃소싱(김준형 교수의 표현)하는 한편, 한반도 외교를 국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

과연 이러한 (자기 이익을 위한) 무시 혹은 방관 정책은 변화할 것인가? 2011년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를 분석할 때, 부정(유지)적 변수와 긍정적(변화) 변수가 동시에 존재한다. 외교보다 경제를 중시하는 경향은 한반도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 동맹국에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경향은 지속할 것이며, 한미 FTA 재협상이나 쇠고기 수출과 같은 분야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동맹국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1994년 제네바 합의 채택 당시 클린턴 행정부처럼 협상을 위해 한미 관계 악화를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능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은 부정적 변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의 과도한 긴장 격화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국방비 감축을 추진하는 오바마 행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북아에서의 안정과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의 필요성은 한반도 정책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2011년 달라진 것 중, 부정적 변수로는 중간 선거를 통해 하원이 공화당을 장악한 것을 들 수 있다.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향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협상국면 조성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 보수와 한국 보수의 연대 경향도 빈번해 질 것이며, 미국 공화당과 이명박 정부가 서로를 자신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긍정적 변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 인내’의 실패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 확대를 통해 핵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이제는 무시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제재와 무시가 실패한 이상, 개입의 필요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란 핵문제와의 관련성과 관

련해서도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 오바마 행정부는 재선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외교 분야에서의 성과도 필요하다. 여전히 아프가니스탄, 중동 등 중요한 외교현안들이 적지 않지만, 북핵문제 역시 세계적인 확산 방지의 상징적 평가지표라는 점에서 해결의 가닥을 잡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동맹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조심스러운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변화의 폭은 연초 한반도 정책 라인이 어떤 식으로 교체될 지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3. 남북한은 대화할 수 있을까?

북한은 2011년 연초부터 전방위적 대화 공세를 시작했다. 과연 남북대화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만남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화는 어려울 것이다. 독백은 대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몇 번의 남북 실무급 접촉이 있었지만, 접점을 찾는 대화노력으로 볼 수는 없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자세로 보기 어렵다.

먼저 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오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남북대화를 통해 6자회담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고, 둘째, 대외환경 차원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의 필요성도 있으며, 셋째, 남북관계 재개를 통해 경제적 실익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 대화를 해야 할 명분, 환경, 실익이 존재한다.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의 제안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가능하면 대화의 급을 실무급으로 낮추고, 이른바 북한의 진정성 요구라는 명분으로 조건을 내세울 것이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받았던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남북관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던가, 아니면 대화에 앞서 천안함 사건

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대화 수요를 고려할 때, 연평도 포격에 대해 북한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포격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며, 북한의 명백한 잘못이다. 그러나 이미 유엔안보리에서 남북 양측의 쌍방 주장을 병기한 천안함 사건의 경우, 북한은 사과할 가능성이 없다.

남측이 대화에 앞서 조건이 걸린 역제안을 하면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은 만남 자체를 수용할 것이다. 그래서 남북대화가 열릴 것이다. 물론 성과는 없다. 북한은 만남 자체가 명분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을 것이나, 대화에서 얻고자 하는 것(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인도적 지원 재개환경 조성 등)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벗어난 의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또한 북한은 대화 자체의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회적 대화 보다는 연속적 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진정성 없는 남북대화는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낮지만, 3차 남북정상회담 논의도 마찬가지다. 마치 1994년초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 회담’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미국의 남북대화 우선론에 따라, 남북대화는 시작되었으나, 남북 양측이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귀결 되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북측의 협박성 발언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남북대화를 깨고, 이를 통해 북한과 대화하려는 미국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현재 이명박 정부도 유사한 상황이다. 대북정책을 전환할 의지도, 동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한미 관계에서 남북대화 우선론을 유지하고, 실제로 남북대화에서는 대화회피 전략을 지속해서, 남북관계 악화를 근거로 북미대화를 억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한다면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이다. 2010년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긴장을 활용해서 전술적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6자 회담 재개에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고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반도의 과도한 긴장을 예방할 필요성을 중시한다면, 6자회담을 미루지 않을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6자회담 재개의 환경은 조성될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외교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에너지 경제지원 등의 상응조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결국 북핵 폐기의 속도를 결정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경우, 초기 이행조치인 군사적 신뢰구축의 당사자가 한국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만큼 한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에너지 경제지원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협상은 하지만,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당연히 한국의 비중과 역할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6자회담의 진전에서 한국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변수다. 한국의 근본주의적 접근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6자회담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

자료1. 6.15 남북공동선언

자료2. 10.4 남북정상선언

자료3. 남북기본합의서

자료4. 남북정상선언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자료5. 9.19 공동성명

자료6. 2.13 합의문

자료7. 10.3 합의문

자료8. 제네바합의문

자료9. 북미 공동コミュニ케

6.15 남북공동선언

(평양, 2000. 6. 15)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 통 령
김 대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정 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평양, 2007. 10. 4)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 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한민국
대 통 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정 일

남북기본합의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쟁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 북 화 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합의한다.

제2장 남 북 불 가 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쟁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쟁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 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교류, 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 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 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2007년 10월 평양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매년 6월 15일을 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내년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는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양측 의회를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활성화해 나가며 쌍방 당국은 남북국회 회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서해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호혜의 정신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확정하고 2008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공동어로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수산분야에서의 협력문제를 12월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해주지역에 [경제협력특별구역]([해주경제특구])을 건설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활용하기로 하였다.
- ⑥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을 위한 실무접촉과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며 2008년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 ⑦ 남과 북은 한강하구에서 2008년안으로 골재채취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안에 실무접촉과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⑧ 남과 북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관련한 항로대 설정, 통항절차 등의 문제를 12월중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 ⑨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⑩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 ① 남과 북은 경의선 도로와 철도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을 위한 철길보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와 공동이용에 필요한 설계, 설비, 자재, 인력 등을 적기에 보장하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조선협력단지 건설

-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2008년 상반기 안에 착수하며 단계적으로 선박 건조 능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에 대한 설비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가까운 시일안에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따라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제1차 회의를 12월중에 부산에서 개최하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 개성공단 건설

-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지질조사를 금년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안에 2단계 건설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로인력을 적기에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숙소건설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도로 건설 및 열차운행 문제를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금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며, 이를 위한 판문역 임시 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신호·통신·전력체계 및 철도연결구간 마감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위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실무접촉을 개최하고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⑥ 남과 북은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이 0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금년내에 통행절차를 개선하고, 2008년부터 인터넷,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금년내에 착공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⑦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⑧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4)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 ①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단천지구광산 투자 등 지하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제3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상반기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을 금년중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쌍방이 관심하는 수역에서의 수산물생산과 가공, 유통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⑥ 남과 북은 지하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수산,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 5)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 ① 남과 북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총리회담 산하에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제4조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공동문화행사,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기상정보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공동응원을 비롯한 사회문화협력사업들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백두산과 개성관광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2008년 상반기중에 개최하고, 기상정보교환과 관측장비지원 등 기상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금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 제5조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인도주의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의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진행하며 2008년 새해를 맞으며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들의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 제6조 남과 북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통보 및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피해복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제7조 남과 북은 남북총리회담을 6개월에 1회 진행하며, 제2차 회담을 2008년 상반기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제8조 수정 및 발효
 - ①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할 수 있다.
 - ②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북총리회담 남측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한 덕 수
북남총리회담 북측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김 영 일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2005. 9. 19, 베이징)

제4차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 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송민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차관보,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6자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정신하에, 지난 3회에 걸친 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7.12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제5차 6자회담을 11월초 북경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합의사항 (2.13 합의, 2007.2.13)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 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I.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II.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 있는 사용 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 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5. 참가국은 9.19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했다.

III.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G)

을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1. 한반도 비핵화
2. 미.북 관계정상화
3. 일.북 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 실무 그룹들은 각각의 작업 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IV.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기간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 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V.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VI.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VII.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 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의사록>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은 각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II조 5항 및 IV조에 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 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하고, 일본이 자국의 우려 사항이 다뤄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또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합의사항 (10.3 합의, 2007.10.3)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베이징에서 중국,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9월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했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 승인하였으며 2.13합의 상의 초기조치 이행을 확인하였고 실무그룹회의에서 도달한 컨센서스에 따라 6자회담 과정을 진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I. 한반도 비핵화

-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따라 포기하기로 되어있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영변의 5MW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 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는 2007년 12월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 조치들은 모든 참가국들에 수용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들에 따라 수석대표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다.

여타 참가국들의 요청에 따라 미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첫번째 조치로서 미국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2주내에 북한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이끌 것이다.

- ② 북한은 2.13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합의하였다.

- ③ 북한은 이어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II. 관련국간 관계 정상화

- ① 북한과 미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한다. 양측은 양자간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할 것이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북한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해 북한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
- ② 북한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 및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 선언에 따라 양국 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다. 북한과 일본은 양측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공약하였다.

III.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2.13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 배럴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미 전달된 10만 배럴 중유 포함)이 북한에 제공될 것이다. 구체 사항은 경제및 에너지협력 실무그룹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

IV. 6자 외교장관회담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외교장관회담 이전에 동 회담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제네바합의문 전문(1994. 10. 21)

미합중국(이하 미국의 호칭) 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호칭) 대표단은 1994. 9. 23부터 10. 21.까지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

양측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94. 8. 12.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 발표문에 포함된 목표의 달성과 1993. 6. 11. 미국과 북한 간 공동발표문 상의 원칙과 준수가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1) 미국 대통령의 1994. 10. 20.자 보장서한에 의거하여 미국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발전용량 약2,000MWe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진다.

- 미국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재정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 컨소시엄을 미국의 주도하에 구성한다. 미국은동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경수로 사업을 위한 북한과의 주 접촉선 역할을 수행한다.

- 미국은 국제컨서시엄을 대표하여 본 합의문 서명 후 6개월 내에 북한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계약 관련 협의는 본 합의문 서명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한다.

- 필요한 경우 미국과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한다.

2) 1994. 10. 20.자 대체에너지 제공 관련 미국의 보장서한에 의거 미국은 국제컨서시엄을 대표하여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번째 경수로 완공시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한다.

- 대체에너지는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해 중유로 공급된다.

- 중유의 공급은 본 합의문 서명 후 3개월 내 개시되고 양측간 합의된 공급일정에 따라 연간 50만 톤 규모까지 공급된다.

3)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 접수 즉시 북한은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동결은 본 합의문서후 1개월 내 완전 이행된다. 동 1개월 동안 및 전체 동결기간 중 IAEA가 이러한 동결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위해 북한은 IAEA에 대해 전적인 협력을 제공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해체는 경수로 사업이 완료될 때 완료 된다.

- 미국과 북한은 5MWe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 후 연료봉을 경수로 건 설기간 동안 안전

하게 보관하고 북한 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동 연료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 4) 본 합의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들은 두 종류의 전문가 협의를 가진다.
-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에너지와 흑연감속원자로의 경수로로의 대체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한다.
 - 다른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사용 후 연료 보관 및 궁극적 처리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협의한다.

2.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 1) 합의 후 3개월 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시켜 나아간다.
- 2) 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 3) 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 으로까지 격상시켜 나아간다.

3.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 1)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를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 2)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있게 취한다.
- 3) 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

4. 양측은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 1)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한다.
- 2)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즉시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IAEA간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된다.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시까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IAEA가 요청하는 사찰은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계속된다.
- 3)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북한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IAEA와의 협의를 거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IAEA 안전조치협정(INFCIRC/403)을 완전히 이행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석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미합중국 수석대표 미합중국 본부대사 로버트 갈루치

북미 공동코뮤니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가 2000년 10월9일부터 12일까지 미합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조-미관계에 대한 그이의 의사를 조명록 특사가 미합중국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조명록 특사와 일행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 데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회담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관심사들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역사적인 북남 최고위급 상봉에 의하여 한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이롭게 두 나라 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로 바꾸어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과 미합중국측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목표로 되며 관계개선이 21세기에 두나라 인민들에게 다같이 이익으로 되는 동시에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쌍무관계에서 새로운 방약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첫 중대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1993년 6월11일부 조-미 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21일부 기본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신뢰를 이룩하며 주의 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 공간을 통한 외교적 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쌍방은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동북아시아 전반에서의 경제적 협조를 확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게 될 무역 및 상업 가능성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경제무역

전문가들의 호상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쌍방은 미사일 문제의 해결이 조-미관계에 근본적인 개선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미합중국은기본합의문에따르는자기들의의무를완전히행하기위한공약과노력을배가할것을확약하면서이렇게하는것이한반도의비핵평화와안정을이룩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굳게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이행을 보다 명백히 하는 데 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쌍방은금창리지하시설에대한접근이미국의우려를해소하는 데유익하였다는데대하여유의하였다.

쌍방은 최근년간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인도주의 분야에서 협조사업이 시작되었다는 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미합중국이 식량 및 의약품 지원 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인도주의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의의있는 기여를 한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미합중국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국전쟁시기 실종된 미군병사들의 유골을 발굴하는 데 협조하여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쌍방은 실종자들의 행처를 가능한 최대로 조사 확인하는 사업을 신속히 전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이상 문제들과 기타 인도주의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2000년 10월 6일 공동성명에 지적된 바와 같이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고무하기로 합의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역사적인 북남 최고급 상봉결과를 비롯하여 최근 몇개월 사이에 북남 대화 상황에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미합중국측은 현행 북남 대화의 계속적인 전진과 성과 그리고 안보대화의 강화를 포함한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발기들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할 자기의 확고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클린턴 대통령과 미국 인민이 방문기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 윌리엄 클린턴 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10월12일

워싱턴